

도의회 의원들 도정·학예 행정 질문 잇따라

“새만금 3개 지자체 의견 조율해야”

올림픽 조직 과대화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질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들이 9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질문을 잇따라 이어갔다.

▲김정기 의원 “새만금 관할 3개 지자체 간 의견차이 조율해야”

먼저, 김정기 의원(부안)은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선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관할 3개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권역 내 3개 지자체들이 RE100산단 유치를 두고서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면서 “각자도생을 꿈꾸는 3개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의 새만금산업단지 전체를, 김제시는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자를, 부안군은 새만금 제7공구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으로 조성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입지 조건이 제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유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분오열은 팔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RE100 국가산단을 반드시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이 RE100산단의 최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지산지소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김정기 의원



김명지 의원



임종명 의원



황영석 의원



이병철 의원

고 강조한 후, “부안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새만금 제7공구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 “올림픽 과대화 조직 확대는 행정공백만 초래”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조직 과대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IOC가 개최지 결정을 위한 일정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국 단위 ‘올림픽 유치단’을 신설하고 47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부서의 인력 공백과 행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검증 없는 예산 투입과 성급한 조직 확대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행정 서비스에 부담을 줄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림픽 유치 추진은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지만, 시기상조인 조직 확대와 무분별한 예산 투입은 도민에게 짐이 될 뿐”이라며, “도정은 정치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유보통합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도민 삶의 현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문제와 기후위

기 대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명 의원, 기후위기 대응·농촌기본소득 등 현안 질의

임종명 의원(남원2)은 △기후위기 대응 △농촌 기본소득 △마을기업 지원 △투하자보조금 기업 노사문제 등 도정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실질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설비투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사업과 관련해 임 의원은 “전북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큰 기대만 심어주고, 실제 사업은 무산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공모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되, 당초 계획했던 도 차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 “전북 염소 산업, 전국 2위에도 제도권 밖 밖”

황영석 의원(김제2)은 “전북자치도 염소 산업이 전국 2위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북자치도가 흑염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은 사실상 ‘기 자체 지원’ 뿐이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염소 등록 지원사업도 순창·장수 일부 지역 3천두에 그치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 전북교육청 테크센터 운영 둘러싸고 예산 낭비·종목사업 등 문제점 제기

이병철 의원(전주7)은 전북교육청의 테크센터 운영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테크센터 운영에 따른 입찰 공정성, 사업 중복, 예산 낭비, 무선망 품질 저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운영 구조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에만 지역센터를 두고 나머지는 전북테크센터가 전담하는 거점형 방식을 취해 지역별 장애 처리 실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북·충남·경남은 10억 원 내외로도 권역별 균형 운영과 신속 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은 예산을 두 배 이상 쓰면서도 성과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생명존중 문화 확산 총력”

민주 도당,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맞아
“자살 예방 예산 확충·제도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원장 이원택)은 서주영 공동수석대변인(사진) 명의 로 9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예방사업 예산 확충과 제도적 지원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가 14,439명,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이 28.3명(잠정치, 보건복지부)에 달하며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자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사회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생명 보호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심리·정신건강 서



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및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맞춤형 지원과 예방 체계로 실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제도적 지원 확대 △생명지킴이 활동 현장의 정책 개선 목소리 경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당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세계 자살률 1위의 불명예스런 기록을 보이고 있어 자살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만호 기자

“관봉권 찌지 분실 의혹,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민주 이성운 의원 “3대 특검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민 요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검찰의 건전법사 관봉권 찌지 분실 의혹사건은 상설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금요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특히 육포로 추정되는 ‘바사’이라는 자필 메모까지 발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데서 비롯된 오만한 행태”라며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3대 특검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해당 사건은 검찰이 아닌 상설특검이나 공수처에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분노에 찬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해 진실 규명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강한 비난 여론을 받은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자영업자·소상공 살리는 전북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하자”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배민규제법 제정도 촉구
자영업자 만나 고충 청취
당사자들과 간담회 추진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권권희)이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및 골목 경제 사수를 위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과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의 출발점, 골목에서 답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권도의당위원장과 오민도 의원, 강성희 도당 대변인, 최한별, 박수정 정주평 공동위원장 등 진보당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진보당 김금주 전주를 공동위원장과 박인수 진보당 중앙위원이 대신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전북의 자영업자 상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상반기 지역경제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북 자영업자 수는 불과 1년 만에 10.2% 감소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업의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독점적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횡포를 지적했다. 배민의 2024년 매출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은 6,408억 원에 달해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폭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에게서 뜯어낸 수수료와 비용 착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와 광고비로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전하며, 플랫폼 기업만 배 불리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설했다.

이에 진보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임점 자영업자의 단체 협의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배민규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이미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보당은 배민규제법 제정과 더불어 공공적 대안인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광주 ‘위메포’, 전남 ‘딱개비’ 등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들며, 공공배달앱이 낮은 수수료(0~2%)와 광고비 없는 구조, 지역화폐 연계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 전북은 전주·군산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개별적 시도가 있었으나 인지도와 예산 한계로 효과가 미미하며,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

진보당은 공공배달앱이 거대한 독과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도, “지방정부와 정치가 의지를 가지고 나설 때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 경제의 상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배민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골목골목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청취하며, 소상공인 단체, 외식업 협회, 배달 라이더 종사자 등 관련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인 도민들에게도 운동의 필요성을 알려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민생 진보정당답게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을 시작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남원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위 구성

남원시의회가 지난 8일 개최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원(위원장 윤지홍 의원, 사진)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남원시 내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시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